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(3.26.)

- 지금부터 「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」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.
 -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,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선제적으로 촘촘히 대응하고 있습니다.

[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]

- 첫 번째 안건은 ‘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’입니다.
-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,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- 내일부터 시작하는 2차 최고가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하였으나,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습니다.
 - 3.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휘발유는 1,934원, 경유는 1,923원, 실내등유는 1,530원으로 지정 합니다.
 - 또한,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어민과 화물선의 유류비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다만, 기존에 낮은 최고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가격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* 휘발유 판매가(원/ℓ) : (2.27)1,693 → (3.12)1,899 → (3.13)1,864 → (3.25)1,819 <1차 공급가 최고액 1,724>
경 유 판매가(원/ℓ) : (2.27)1,597 → (3.12)1,919 → (3.13)1,873 → (3.25)1,815 <1차 공급가 최고액 1,713>

-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불법·부당행위,
공동체를 해치는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는 엄단할 것입니다.

[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]

- 두 번째, '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'입니다.
- 정부는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시행 중이며,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23개의 특별관리품목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계별 물가 파급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공산품·가공식품 전반과 20개 추가 품목으로 확대하여 총 43개 품목을 지정합니다.
- 전기·가스 등 공공요금,
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 농산물,
수입의존도가 높은 오징어·명태 등 수산물 등의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요소와 요소수의 경우, 재고여력이 있음에도 일부 판매처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3.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합니다.
- 과도한 불안감으로 사재기에 나서는 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[계란·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]

- 다음으로, '계란·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'입니다.
- 담합 조사 중인 계란은 제재 확정시, 적발된 업체·협회의 설립허가 취소 등 엄정대응하고,
- 산지 계란가격 정보 제공은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며, 민관합동 가격 조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겠습니다.

- 돼지고기는 담합 적발업체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농가와 가공업체의 거래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[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]

- 마지막으로, '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'입니다.
- 오피스텔, 연립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건물의 경우에도 관리비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.
 -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,
 - 관리인 선임 및 건물 관리 과정에서 거주자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-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와 직결된 필수품을 과도한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 -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쌓아두는 욕심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배려입니다.
 -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데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.
- 다음으로 농식품부 장관님께서 「계란·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」을, 산업부 차관님께서 「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」을, 법무부 차관님께서 「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」에 대해 차례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다.
(농식품부, 산업부, 법무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